

보도일시 (인터넷) 2024. 2. 13.(화) 11:00,  
(지면) 2024. 2. 14.(수) 조간

배포 2024. 2. 13.(화) 06:00

## ‘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 3월 중 첫 회의 개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 추진 위해 협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약 65%에 해당하는 연간 8.7만 톤으로 추정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6.5만 톤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요 하천·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3월 중 권역별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호우기 등 하구둑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다에 한 번 버려지면 육상에 비해 수거·처리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라며,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하천으로부터 오는 해양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책임자	과 장	이성희 (044-200-5300)
		담당자	사무관	서민재 (044-200-5301)

